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3년 2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3년 1월 19일 ~ 2013년 2월 1일

주요 키워드

- 1.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 강화** :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세부개편안을 발표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와 농림수산물부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힘. 28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의약품 안전 업무만 식약처로 옮기는 것은 업무절차만 복잡하게 만들며, 의약품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 의사협회도 비슷한 이유로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처 이관을 반대함.
- 2. 보험정보원 설립 관련 논란** :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보험정보원 설립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함. 보험정보원은 일종의 민간 심평원으로서 개인의료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는 민영보험사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이에 대해 최병천 정책보좌관을 포함하여 많은 참석자들이 비판하는 요지의 발언을 함.
- 3.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 : 1월 27일 밤과 28일 새벽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짐. 이는 삼성측이 불산이 누출된 것을 발견 했을 시 안전조치 미흡, 사고 처리 관련 능력대응에 따른 것임. 불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제기되는 가운데, 각종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음.
- 4. 서남의대 졸업생 학위 취소 사태** :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서남학원 특별감사 결과 의대생들의 교육이 부실하고, 이에 졸업한 134명의 학사학위를 반납하라고 통보함. 졸업한 의대생들의 의사 자격을 뺐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의료계에서는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교과부는 이에 대해 성의 없는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면 논란이 일고 있음.
- 5. 기타** :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귀 결정,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전공의 노조 설립, 송영길 인천시장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비영리병원 관련 요청,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 등.

1. 보건의료정책

○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 (1. 2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세부개편안을 발표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와 농림수산물부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러한 개편으로 식약처가 식의약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발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원들은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천연물신약과 안전상비약과 같은 일련의 정책에 대해 식약청의 부담이 커진다고 걱정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 설문 조사 결과 발표 (1. 22)

이 조사는 전국 17개 병원에서 암환자, 암환자 가족, 암전문의,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 항목은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 의향서 작성 시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등으로, 조사결과는 SCI 학술지인 'Supportive Care in Cancer' 온라인 판에 발표했다. 응답자 모두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작성시기는 암환자와 가족 및 전문의는 60% 정도가 말기나 죽음이 임박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의 60% 정도는 건강할 때나 암을 진단받을 때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인 치료 방침 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일반인은 평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함항목에 있어서 95% 이상의 암전문의들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치료 여부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암환자와 가족·일반인들은 70% 정도만 포함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젊고 학력수준이 높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제도화·활성화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간 인식 차이를 좁히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미래 의료정책 포럼' 개최 (1. 24)

3부로 진행된 이 포럼의 1부 주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였다. 이 기호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부담능력에 기반을 둔 합리적 목표설정,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우선순위에 입각한 급여 확대, 체계적 지출관리체계 구축 등의 4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김영인 성바오로병원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병원에 비용 부담이 지어지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와 본인부담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의 주제는 '의료공급체계의 혁신과 맞춤형 질병관리'였다. 지영건 CHA의과대학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지역맞춤형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강화 등의 의료공급의 균형발전, 응급의료시스템의 선진화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필수 의료서비스 보장 강화, 의료자원의 질적·양적 분포의 적정화, 학교 보건사업 통합 및 확대 등이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정보 제공, 소비자용 진료 지침 제작, 1차 진료부문 활성화 등의 의견이 피력되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의약품 사용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1. 24)

세미나에는 건정심 이진이 부연구위원이 대체조제 활성화의 의무화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여, 대체조제 활성화를 의무화하거나 통보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 제약사의 마케팅이 반영되며,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쓰는데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대한약사회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의협의 이재호 정책이사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20배 늘려도 약제비 절감액은 70억원 수준이며, 얼마 되지 않는 금액 때문에 불필요한 직역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처방단계에서 1일 처방 인센티브를 하여 획기적으로 2조원을 줄일 수 있다며, 저가약 1일 처방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리고 약국이 고가약으로 바꾸어 처방하거나 불법 대체조제 문제도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모세 보험이사는 현재 의약품의 처방률이 너무 많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처방하는 의사에게 리베이트와 같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의약품을 바꿀 수는 있어도 품목수를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담합을 막기 위해서도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사들의 비고용출실험이나 생동성시험보다 개인의 임상 경험을 크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이며,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성분명으로 최저가 입찰을 해도 의약품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사무장 부당이득 징수 근거 법안 마련 (1. 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각각 요양기관 개설자 뿐만

아니라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은 속임수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어, 면허를 빌어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과 지자체장이 보험급여와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보공단 현지확인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건보공단의 징수권한을 위한 현지 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채점오류 합격자 5명 불합격 처리 (1. 25)

국시원은 23일 제 77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채점 오류가 발생해 25일 5명의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는 전산 채점 프로그램을 잘못 입력해 배점에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합격되었던 수험생이 불합격자로 전락한 사례는 없었다. 국시원은 책임을 감수하고 대책수립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사회보장기본법 시행 (1. 27)

복지부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는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 개최 (1. 28)

위 공청회는 민주통합당 김성주·김현·최동익 의원이 식약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준비사항과 방안을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하였다. 그런데 공청회에서는 각 지역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특히 한의계와 약계는 '식약청'의 '식약처' 조직개편안에 대한 분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었다. 한의계는 식약청에 약사직능을 가진 구성원이 많아 천연물신약과 같은 심각한 보건의료정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약계는 식품과 의약품 및 건강식품 모두가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와 같이 하나의 잣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식약청과 복지부가 의약품 허가 및 마약류 관리법 등의 안전관리 부문은 이관에 합의했고, 약사법 위반·의약품 유통 판매 등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과 조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안정상비의약품 관리와 의약품 유통 등 기타 안전관리 영역에 대해 이관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생산단계 안전 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수입축수산물 검사에 대한 이관을 통해 수입식품 검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윤정 교수는 식약청의 식약처 이관과 함께, 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능을 식약처로 옮기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실의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밀한 점검없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업무를 일원화하면 식품안전업무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선진국들의 경우 식품과 의약품을 관리하는 조직이 따로 있고, 의약품 안전은 보건 관련 기관에서 수행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이번 조직 개편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건강과 위생안전의 소관부처가 복지부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이중 의약품의 안전 업무만 별도의 부처에 두는 것

이 업무절차만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정형선 교수는 '임상시험→인허가→생산→건보급여→유통→처방→사용' 이르는 의약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인허가 기능만 별도의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인허가 업무와 보험 약제 업무는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처에서 업무를 할 경우 필요 이상의 중복업무와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복지부를 보건의료정책 담당 차관과 복지 담당 차관 2명이 담당하는 사회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키고, 의약품을 보건의료정책 담당 차관 업무소관으로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현 교수 역시 의약품 정책만 분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며, 보건의료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는 기관의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협진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 28)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 중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의료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하여 1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에게 불편과 이중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 절약의 편의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등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진료를 하는데 악용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전정희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 민주당 통합당 민병두·이학영 의원, '보험정보원 설립-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1. 29)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내부 보고 문건인 '제93호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방향'을 입수하여, 보험정보원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병천 정책보좌관은 보험정보원 설립에 대해 맹비난했다. 최병천 보좌관은 금융위원회가 12년 발표한 '실손보험 종합대책'의 보도자료와 '내부문건'을 근거로, 현재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구상 및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심사위탁 대행기관' 설립보다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민간 심평원 역할을 하는 보험정보원이 설립되면 급여-비급여, 공보험-민영보험, 진료정보-심사정보가 통합되는 '초대형 보험 빅브라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05년 작성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보험정보원 설립명분으로 밝히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억제 등의 문제들은 보험정보원 설립의 논거로 삼기에 매우 취약하다고 강조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실손보험 그 자체가 과잉진료와 허위 청구의 인센티브를 구조적으로 갖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의 21.3%의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내 법정본인부담금은 실손 보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급여 심사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공적정보가 민영보험사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위탁 대행기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비급여 코드화·가격표준화·급여화 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토론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보 집중을 제어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온다며,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반문했다. 강창구 사회보험노조 정책위 의장은 보험정보원 설립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며, 공적보험에 집적된 정보는 어느 특정 이익단체를 위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질병정보는 3~5년 정도 지나면 폐기하거나 아예 집적하지 않는 것이 맞지, 그것을 어느 기관에 모아놓으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박영욱 교수는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보호는 엄격해야 하고, 가입자 본인의 동의 없이 기록이 오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명 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지난해 8월 금융위 실손보험 종합대책에서 나온 '심사위탁 대행기관'에 대한 근거부터 봐야하며, 이는 민영보험사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병원협회 등도 보험정보원 설립이 좀 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의결 (1. 31)

의협이 8개월만에 복귀한 가운데 열린 13-3차 건정심에서는, 위 실행계획으로 응급의료 개선 관련 안과

산모신생아 관련 안이 의결되었다. 응급의료 개선안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경증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30%의 야간가산을 100%로 확대한다. 야간운영의 기준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이고, 소아과를 포함해 내과·가정의학과·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이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 주는 가산금도 100% 인상되어, 전담의를 응급실 진료에 집중시키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또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하여 중앙·권역 응급의료센터는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30% 인상을 했다. 산모 및 신생아 관련 계획을 보면,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 위험도 등을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를 30% 가산했다. 그리고 부족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병상 개설을 확대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의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하였다. 이 정책들은 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지급하는 초빙료를 100% 인상하며,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의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그리고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기로 하여, 1년간 분만건수 200건 이하의 병원에는 50%, 100건 이하 100%, 50건 이하 200%를 적용한다. 한편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이 보고되어, '의약계 발전 협의체' 산하에 실무 TF를 구성해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 1)

복지부는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되어 공공의료의 범위를 기존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 등의 민간 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90%를 차지하는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국공립병원만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설립·소유 중심)에서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기능 중심)로 재정의했다.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평가·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해야 한다.

2. 보건의료 산업기술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 DB 구축 (1. 22)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진료내역·검진결과·거주지 및 보험료·요양기관정보 등을 바탕으로 증화계통추출 방법을 통해, 전국민 건강정보를 대표하는 연구용 표본 DB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12년 7월부터 12월까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를 통해 구축했으며, 02년도 대상자를 기준으로 10년까지의 건강상태에서 의료 이용 및 사망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9개년 코호트로 구성되어 있다. 구축된 자료는 성별·연령별·소득분위별 등으로 구분해 추출된 국민건강정보를 대표하는 약 100만 명의 '표본 코호트 DB', 크론병 등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희귀질병 DB', 01년부터 10년까지 5번의 건강검진을 모두 받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DB' 등 3종이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료내역과 검진결과 등이 포함되어, 보건의료분야의 과학적 근거생산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궁극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자료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주장했다.

○ 사단법인 한국의료수출협회 창립 (1. 23)

수출협회는 12년 말 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정식 법인등기를 마치면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과 건설·금융·컨설팅·제약·의료기기·의료IT 분야 기업 및 단체의 정식회원 등록을 받

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수출협회가 민간차원에서 국내 병원의 해외 홍보와 마케팅 및 교육 분야를 맡아, 병원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계획으로는 월례 해외의료포럼, 병원수출 가이드북 발간, 외국 현지에 한국병원 전시 및 컨퍼런스 개최, 의료시장 개척단 파견, 수출 대상국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IMTC(국제 메디컬 트레이닝 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협회의 초대 회장은 이왕준 관동의대 명지병원 이사장이 맡았다. 23일에는 협회 창립 기념으로 '병원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세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채민 복지부 장관, 문정림 의원, 노환규 의협 회장, 김윤수 병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 일본, 로봇 '다빈치' 원격수술시스템 개발 (1. 23)

일본 고베의과대학부속병원은 수술 중의 영상과 음성을 즉시 수신해, 의과장 등이 집도의에게 음성으로 통보하여 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인체 내부에 카메라가 부착된 수술기구를 삽입해 원격지에서 3차원 영상을 보면서 기계를 조작한다. 이 병원은 10년부터 로봇을 도입했으며, 일본 내 의료기관에서 현재 70기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아 안전성 확보가 과제였고, 이에 여러 병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각 병원에서 집도의를 교육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 병원측은 원격지에서 전달된 영상에 터치펜으로 환부의 위치와 대처법 등을 알려주는 이미지 송신 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에서 신장세포 제작 실험 성공 (1. 24)

일본 교토대학 iP세포연구소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신장의 다양한 세포가 되는 '중간중배엽'이라는 세포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고 신장의 세포로 키우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중간중배엽을 고효율로 제작하여 iPS세포를 1개씩 분해해 배양하고, 성장에 필요한 화합물과 단백질을 추가하여 iPS세포의 약 90%가 중간중배엽으로 변환·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중간중배엽 배양 약 2주 후 신장 사구체와 관모세포로 성장하는 데도 성공했다. 또한 중간중배엽을 마우스 태아의 신장세포와 함께 배양하자 일부가 관상화되는 것도 확인했다. 신장은 구조가 복잡하고 세포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자세한 메커니즘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로 신부전과 투석이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신장세포와 조직을 이식해 기능 회복을 돕고, 의료비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 보건환경센터, 식중독 병원균 최단 시간 검사법 개발 (1. 24)

연구진은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등 총 12종의 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에 각각 빨강·파랑·녹색·노랑색을 접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감염성 위장염이 의심되는 경우 노로 바이러스와 사포 바이러스 등 4가지 바이러스의 발색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판정할 수 있다. 현재 종류를 판정하기까지 바이러스는 2~3일, 세균은 4~7일 소요되는데, 이번에 개발한 검사법으로 7시간만에 식중독 병원균을 찾아낼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원자력연구원과 MOU 체결 (1. 24)

이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식품 중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원자력 연구원과는 '식품 중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식품 중 방사능 오염 관련 정보, 연구·분석 관련 업무 및 효과적인 안전관리 공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방사능 관련 정책수립 및 안전기준 법률 재개정, 방사능 내외부 피폭관련 기술 및 안전관련 현안문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과 관련된 방사선기술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12년 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협력을 통해 플루토늄·스트론튬 등 고위험 방사성 핵종 분석 장비 및 실험실을 구축했다.

○ 조류독감바이러스 H5N1 연구 재개 예정 (1. 26)

일본 도쿄대학의과학 연구소의 독감연구 관련 과학자 40명은, 현재 자발적으로 일시 중지하고 있는 조류독감바이러스 H5N1의 포유류에 대한 감염 연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흰족제비들 사이에 호흡기로 전염될 수 있는 H5N1 변종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잠재적인 대유행의 매커니즘을 파악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H5N1의 변형방법이 공개되면 테러리스트들의 생물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논란 끝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당 논문 게재를 금지하고 연구를 일시 중단하라는 조치를 내렸었다.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1. 25)

설명회는 올해 보건의료 R&D 신규과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어,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는 질병중심 중개 중점연구,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희귀질환 진단치료, 기후·환경변화질환 대응기술 개발 등 4가지이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과제에 편성된 예산은 10억원이며, 과제당 2년 이내 연간 최대 2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동원격진료 로봇 승인 (1. 28)

미국 언론들은 FDA가 아이로봇사의 자동원격진료로봇인 'RP-VITA 리모트 프레젠스 로봇(RP-VITA Remote Presence Robot)'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로봇은 화상연결을 통해 다른 곳에 있는 의사와 환자가 영상통화를 할 수 있으며, MRI·CT스캔 X-ray 등을 촬영할 수 있다. 로봇을 통해 진단자료를 받은 의사가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로봇 통제가 가능하다.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조종자가 환자의 병실 번호를 누르면, 로봇이 알아서 환자의 병실로 찾아가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 로봇으로 환자들은 미국 내에서 5,000 ~ 6,000명의 의료진과 진단 및 치료를 받는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동일효능(약효)군 치료기간 중복 현황 분석 결과 발표 (1. 28)

11년에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번 이상 발급받은 환자의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 효능(약효)군 내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경우는 전체 처방건의 0.9%였으며, 이 중 4일 이상 처방기간 중복 건은 전체 처방 건의 0.2%로 나타났다. 4일 이상 중복처방 된 건수를 전체 환자로 추계하면 연간 약 390만 건이고, 낭비되는 약품비의 규모는 대략 260억원(전체약품비 대비 0.3%)으로 추정된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중복처방 비율이 높아, 의료급여 전체 처방 건의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처방 의약품을 발생시킨 두 처방전이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12.9%, 다른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87.1%이다. 동일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방기간이 중복된 의약품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환경오염, 과다복용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경기도, '글로벌 나눔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MOU' 체결 (1. 28)

김문수 경기도지사, 마가렛 클라크 케이웨시 주한 가나대사, 해외 의료지원 민간기관 등은 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지원 확대, 저개발국가 의료지원, 해외 재난대응 긴급구호 등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평화의료재단과 함께 올해 7월 말까지 가나 스라파 코코도 지역에, 의료시설 4개동 규모의 메디컬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의료인 연수, 병원경영 연수,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메디피스는 해외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구호 인력 파견과 교육을 맡았으며, 아프리카미래재단과 경기도의료봉사단은 무의촌 나눔의료 활동을, 경기국제의료협회는 저개발국가 의료인 연수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 일본 후생노동성, '재생의료·세포치료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안(가칭)' 법안 확정 (1. 29)

법안은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 등을 사용한 재생의료 및 세포치료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골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위험)이 큰 치료를 계획하는 의료기관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환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상안도 들어 있다. 나아가 인체의 기능 재생뿐만 아니라 가공한 세포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위험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규제한다. 후생 노동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의료 규제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생의료 등의 임상연구는 국가에 의한 가이드라인으로만 통제해 왔으며 규제법이 성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병원급 43곳 경영실적 분석 (1. 30)

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의료수익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병원들은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평균 242억3,000만원과 246억3,000만원의 의료수익, 3/4분기와 4/4분기에는 243억7,000만원과 233억9,000만원의 의료수익을 올렸다.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외래는 전반기와 비교해 2.6%의 의료수익 감소가 있었던 반면 입원은 3.5%나 줄어들어 수익이 더 크게 줄었다.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이전의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의료수익의료이익률'로 계산한 결과, 하반기의 경우 전반기의 절반수준인 4.6%에 머물렀다. 연구원은 이렇게 경영수익이 악화된 것은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익은 감소했지만,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늘어 의료비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유한양행, 유전체 분석 서비스 본격 상용화 (1. 29)

유한양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테라젠이텍스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인 헬로진 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헬로진은 08년 테라젠이텍스가 한국인 게놈을 분석한 기술을 바탕으로, 소량의 혈액을 통해 개인의 유전형을 분석하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이다. 한국인 발병 및 사망률이 높은 암 질환·심혈관계 질환·뇌 질환을 포함한 일반 질환 중심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전문임상의사위원회를 운영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테라젠이텍스는 다양한 유전자에 대한 분석 기술 및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헬로진을 통해 도출된 개인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1~2주 내로 신속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헬로진은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환자의 유병률 대비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서비스로, 생활습관과 식생활 등에서 개인 맞춤형 관리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테라젠이텍스는 질병관리본부에 277종의 국내 최다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고하였는데, 5년 후에는 유전자 1,000개 가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개인별 맞춤 의학을 확산하기 위해 유전자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정부에서도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발족해 유전체 기술 개발에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연간 700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1곳 설립 예정 (1. 31)

복지부와 진흥원은 보건복지부 대강당에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은 올해 하반기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부는 1차년도 사업기간에 약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의료기기 분야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크며, 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대학원은 글로벌 의료기기산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의료기기 경제성 평가 과정, 의료기기 기술경영 마케팅 과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 송영길 인천시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비영리병원 관련 요청 (1. 3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전국 광역시 및 도지사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인천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세우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영리병원인 외국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한데다, 외국인 환자 진료는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오히려 임상연구 등에 재투자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금과 진료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설립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국제병원은 연수구 송도동에 들어설 예정으로, 올해부터 16년까지 80,719㎡ 규모 부지에 800병상 내외의 종합병원으로 계획되며, 사업비는 4,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내 원료의약품 EU 수출 지원 (2. 1)

식약청은 2월부터 원료의약품 GMP 서면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가동한다. GMP 서면확인서는 생산국의 규제당국에서 관할 제약업체가 생산하는 원료의약품이 EU GMP와 동등한 기준으로 관리됨을 확인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EU가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원료의약품 ‘GMP 서면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수입 원료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3. 제약업계

○ 보건복지부, 천연물신약 관련 이해 당사자 초청 예정 (1. 19)

복지부는 오는 2월 14일 열리는 3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제약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자와 식약청 담당자를 불러, 천연물신약의 개발·허가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천연물신약을 비롯한 한의학 정책 방향을 정하고, 올해 안에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약사들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 의사협회는 어느 제약사가 참석하더라도 문제는 없고 정부기관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에 대해 직능단체들끼리 해결하라고 떠미는 의도가 있고, 식약청 역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 제약사 수출 지원 정책 마련 (1. 20)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6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개척 및 인허가 획득 지원을 위해 13년 54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외시장·통계정보 이용지원에는 9억원이 투입되어, 총 6개 기업에 정보 구매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특허 및 인허가 획득지원에는 총 3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약개발 전주기 정보제공을 위한 종합 포털 구축에는 3억원, 제약산업 선진화 컨설팅 지원에는 6억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수출 전략 국가를 선정해서 Pharm-fair를 수시로 개최하는데 1억원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조달을 통한 의약품 수출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 동아제약, 스티렌 개량신약 제조사 및 개발사 동시 가처분 신청 예정 (1. 21)

동아제약은 21일 오후 예정되었던 ‘스티렌’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앞두고, 제조사인 풍림무약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대신 개발사인 지엘팜텍을 함께 묶어 다시 가처분을 제기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제품 출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동아제약은 최근 이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다. 스티렌 개량신약의 임상은 지엘팜텍이 진행했으며, 스티렌의 용매(에탄올)를 이소프로판올로 바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제조는 풍림무약이 담당하며 제1약품 등 6개사에 제품을 공급한다. 스티렌 개량신약의 개발사인 지엘팜텍은 현재 동아제약과 가처분 신청 외에도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 정부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1. 22)

이번 개정안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결정 시 13년 2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약제비 산정방식의 개편 등으로 의약품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적용 시기를 1년 연장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은 12년 2월부터 14년 1월까지 2년간 구입 금액으로 한다. 또한 심평원의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업무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정부는 약가인하 조치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 동안 제도 시행을 유예하여 요양기관의 편익제고 및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고,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심평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기대했다.

○ 제약업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1. 23)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은 인수위에 제약산업 육성 방안과 기대효과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약조합은 정부 연구개발자금 및 세제 지원 확대,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보험약가제도 실현, 제약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강화 등을 제약산업 육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정부의 신약 연구개발 지원자금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하여 외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센터 유치에 위해 조세감면 기간 연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약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나친 통제는 투자에 역효과만 나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제약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사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간 상호인증(MRA)제도의 협의를 추진하는 등 협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약산업 육성 간담회' 개최 (1. 23)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위 간담회에는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과, 각 제약기업 대표들, 그리고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제약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이 논의되어, 제약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제약협회는 올해 지원 예산인 2,500억원은 부족하며 1조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기술혁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개편해서 산학연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혁신 생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식약청, 교과부 등도 이러한 지원확대에 공감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혁신형 제약사 대표 7인은 제약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폐지, 식약청의 역량 강화, 해외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 리베이트 근절 시스템 개선 혁신형 제약사 약가 우대 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 국민연금, 동아제약 지주회사 전환 반대 (1. 24, 29)

24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28일 개최될 동아제약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심의하고, 회사 분할계획 승인 및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연금은 동아제약의 지분 9.39%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동아제약의 분할계획이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로 인해 주주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나온 결정이다.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아제약은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약품비 관리 건강보험정책세미나 개최 (1. 24)

식약청의 의약품안정정책과 유대규 사무관은 '제네릭의약품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내 기업간 제네릭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품질의 대량생산 및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동성시험 의무화 대상 확대, 생동성 시험의 윤리성 관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신뢰성 확보 노력, 생동성 품목을 엄격하게 변경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도 식약청이 생동성 시험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제네릭 신뢰성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약기업 리베이트 현황 (1. 29)

우선 혁신형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인 동아제약·CJ제일제당·대화제약이 리베이트로 적발되었다. 대화제약은 09년 1월부터 12년 5월까지 자사 의약품 18종의 판매촉진을 위해 의사 667명에게 7억7,272만원 상당의 이득을, 09년 11월부터 10년 10월까지 약사 391명에게 1억3,510만원의 이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은 10년 5월경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자사 법인공용카드 300매를 신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카드사용액은 43억원에 이르고, 쌍벌제 시행 이후인 12년 2월까지도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지속하여 2억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조직적 증거은폐 및 수사방해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명문제약은 08년 1월부터 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에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2월 8일부터 1개월 간 154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2011 ~ 2012년 등재 신약, 일반의약품 대중광고 심의 분석 결과 (1. 29)

지난해 출시된 신약은 총 28개 품목으로, 이는 11년 16개 품목보다 12개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 제약사의 등재 신약은 11개 품목으로 11년 대비 4개 품목이 늘었으며, 여기에는 SK케미칼 '페브릭정80mg', 한독약품 '솔라리스주', 유한양행 '비리어드정' 등이 포함된다. 외자사는 17개 품목이 등재되어 11년 대비 8개 품목이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안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정',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다사' 등이 포함된다. 한국제약협회는 12년 일반의약품 대중광고 사전 심의 건수는 1,944건으로 11년 대비 593건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중 적합 판정을 받은 건은 1,908건, 부적합 건수는 36건이었다. 305건을 심의 받은 혼합비타민제가 가장 많았고 백신류, 해열·진통·소염제, 기생성 피부질환제, 간장질환제, 치과구강용약 순으로 심의건수가 높았다.

○ 일본 일반약 판매 문제 관련 논란 (1. 30)

지난 11일 일본 대법원은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후생노동성이 반발해 새 규제안 마련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이에 일본 제약단체들은 일반약의 대중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고, OTC의약품협회는 생활습관 의료용 의약품을 기조로 한 일반의약품의 보급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협회는 약사 및 약국 단체와 연계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스위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대중약협회(WSMI)와 협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일반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성 문제를 부각시켜 일정한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후생성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전면 해금을 요구해온 인터넷 관련 업계와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단체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 2013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지난해와 동일 (1. 30)

올해 인증 최소요건은 의약품 매출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R&D 투자 비율 7% 이상,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5% 이상으로 12년과 동일하다. 이러한 인증기준은 향후 대폭 강화되어, R&D 비율을 15년 10~12%, 18년 15~17%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청 및 선정 시기도 지난해와 유사할 전망이다. 선정 기업 수는 12년보다 다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주요 혁신형 제약사들이 과거 리베이트 사건으로 탈락할 위기에 처했지만, 혁신형 제약 기업 지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고,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원이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 국내 제약사 중국 수출 및 임상신청 현황 (1. 31)

JW홀딩스는 지난 21일 중국 천진그린파인제약과 국산 4호 신약 퀴놀론계 항균제 '큐록신'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식약청에 제품등록을 마친 후 16년부터 5년간 '큐록신' 완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JW홀딩스는 지난 06년부터 항생제 '프리페넴' 수출을 통해 중국에서 연 700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09년부터 '콤비플렉스 리피드' 수출 계약을 하였다. 동아제약은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

료제인 '모티리톤'이 지난해 10월 중국내 임상 1상과 가교임상을 신청했다. 모니리톤의 중국 진출은 지식경제부 글로벌 천연물신약 추진 연구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안국약품은 천연물신약인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진해거담제)에 대해 지난해 8월 중국 임상3상을 신청했고, 보령제약의 고혈압신약 '카나브'도 수출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녹십자는 지난해 중국 의약품도매법인 '안휘거린커의약품판매유한공사'를 설립해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중국 의약품 시장은 12년 기준 약 166조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 성장을 보이고 있다.

○ 전문약 바코드 표시 의무제, 6월까지 계도기간 적용 (2. 1)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그동안 재고의약품 소진 및 사후관리 정비 차원에서 적용기일 연장을 요청한 결과, 복지부가 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전문의약품에 제조번호·유효기간이 포함된 바코드 표시 기록 및 관리가 의무화되면서 도매업체들은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다. 하루에 수십만 품목이 입출고 되는 상황에서 제품 하나하나의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적시적소에 배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도매협회는 복지부에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올해 6월 30일 까지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후인 7월 1일부터 입출고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4. 의업단체

○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1. 19)

안건 토의에 앞서 경문배 대전협 회장은 '표준근로계약서 및 근로시간 산정, 근로여건 개선 및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전공의 신분보장 및 권리 명시, 근로시간 상한제, 임금인상·최저당직비·퇴직금, 일반휴가 및 출산 휴가 복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문배 회장은 전공의들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명시한다는 사실에 큰 의의가 있으며, 전공의노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각 병원별 노조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후, 전공의노조 구성을 대전협이 위임받아 진행한다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에 대전협은 전국 6개 지부로 나누어 대표자들을 선출해 노조를 구성하며, 경문배 전공의를 노조 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 광주전남의약품도매협회, 온라인몰 투쟁 중앙회 가담 (1. 22)

광주전남도협은 30회 정기총회에서 도매업권을 침해하는 온라인몰에 단호히 대응하고, 온라인몰 투쟁 중앙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한미약품·대웅제약 등의 거대 제약사들이 온라인몰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하며 도매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몰은 중대한 업권침해로 모든 도매업체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 대한의사협회, 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 비판 (1. 23)

건강증진협력약국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강서울 36.5' 정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4월부터 2~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약국을 활용해 금연상담 서비스·약력관리·자살방지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약국이 질병에 대해 예방·진단·치료·건강상담 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와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은 자칫하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은 복지부와 용산구에 유권해석 및 입장을 질의하고 회신을 요청했다.

○ **대한의사협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책 마련 촉구 (1. 24)**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는 의료기관이 약제 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초과된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협은 이 정책으로 의료기관과 건보공단 사이에 민사소송이 남발되는 등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며, 약제비 삭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심평원에 보냈다. 의협은 위와 같은 제도들로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최선의 진료를 하고도 손해배상의 피해를 보고 있고, 이는 현행 급여기준이 의학·임상적 판단보다는 보험재정 상태를 감안해 설정된 데에 따른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의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문 (1. 24)**

노환규 회장은 인수위를 방문해 새정부에 '의료분야의 국민행복 제안'을 제시했다. 노환규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료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성장했지만, 과잉진료와 의료 왜곡,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간의 양극화 심화, 최선의 진료보다는 경제적 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의료서비스 수준이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며, 건강보험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계 정책의 부정적인 요소로는 '저수가 정책'과 '관 주도의 정책'을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가가 원가의 73.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늘어나게 되고, 수가 보전이 잘 되지 않는 산부인과나 응급실은 사라져 성형 등 비급여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이 양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 주도의 정책으로 인해 포괄수가제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수도권 의료집중화로 인한 지방의 의료공동화 현상, 의과대학 교육의 부실 문제 등이 야기되었다고 말했다. 노환규 회장은 진료비 현실적 저수가 제도 개선, 동네의원 살리기 정책 강화, 상시 의정 협의체 운영,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원격의료 논의 중단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인수위원들은 노환규 회장이 지적한 의료계의 문제점들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적정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의 건' 심의 결정 (1. 26)**

총회에서 치협 집행부와 복지부가 추진해온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기한부 연기 동의안'이 제의되어 표결에 들어갔고, 그 결과 출석 대의원 182명 중 과반인 92명의 찬성, 82명 반대로 가결됐다. 이에 '소수정예 유지'와 '전문의제 전면개방'을 놓고 빚어진 갈등은 일단 극한 상황을 피했고,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14년 정기대의원총회로 처리가 무뎠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가 대의원총회 의장단 아래에 설치된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대한약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전국교정과동문연합회·소아치과개원의협의회 등 전문의제안을 찬성하는 쪽과 대한치과개원의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반대하는 쪽의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 **대한병원협회,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추경예산 확보 촉구 (1. 27)**

병협은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년 167만명에서 12년 156만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1인당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비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의료급여 환자 진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에 대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매년 하반기에 반복적으로 미지급금 사태가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료급여비 미지급은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저수가로 인해 종합병원의 이익률은 1% 수준으로 상당수의 병원이 병원운영을 위해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 1회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총회 개최 (1. 26)**

전공의노조는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제1회 노조총회 및 노조문화제'를 개최하고, 전공의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개 지역지부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투표 결과 경문배 대전협 회장은 만장일치로 제 4대 위원장을 겸하게 되었으며, 선한수 전공의(동국대 일산병원)가 수석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창겸 의협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문배 위원장은 대전협과 전공의노조는 전혀 다른 단체이며, 노조 활성화를 위해 대전협이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완성 및 단체계약 실시해 국회 입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 리베이트 소송 제약사 13개 확대 예정 (1. 28)

감시운동본부는 동아제약·대웅제약·중외제약·GSK·한국MSD 등 5개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환수소송을 제기하고 약물명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GSK의 조프란, 동아제약의 스티렌 등이 포함된다. 오는 3월 제조할 의약품도 공개하여 한미약품의 아모디핀 등 총 13개 제약사의 17개 품목에 대해 제조할 방침이다. 감시운동본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상이 의료소비자·건보공단·지자체 등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 비율은 매출액의 35%로, 판매수익의 약 20%가 리베이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럴 경우 소비자의 손해액은 연간 약 2조1,8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었다.

○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의료계 반발 (1. 29)

전국 의사총연합 김성원 대표는 29일 동아제약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12년 만에 터진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 100명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아제약이 개원의들에게 직원대상 인터넷 의학강의를 요청해 촬영해놓고 검찰에 이를 리베이트라고 꾸며 말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콘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 등 정당한 대가를 받았는데도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라고 허위진술했다고 비난했다. 이 사건으로 지방 의원가를 중심으로 동아제약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들도 리베이트 환수소송 및 불매운동으로 동아제약을 압박하고 있다. 의협도 이와 관련해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질의를 하며 동아제약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제약이 개원의를 대상으로 혐의를 씌우고 있으며, 정부의 다른 정책들도 개원의의 처지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개원의 죽이기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계기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폐지하고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치과병원 노조 설립 (1. 23)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 등 총 7곳에 국립대병원 산하 지부를 두게 되었다. 노조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 울타리에 있는 부산대치과병원이 산별노조로 설립됨에 따라 소속 조합원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병원측의 주도로 설립된 양산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의 무원칙하고 중속적인 노사관계에 경종을 울리며, 지지부진한 부산대병원의 임단협 교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대한약사회, 불법 리베이트 근절 입장 발표 (1. 29)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현재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사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공급자와 소비자 및 처방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을 간과하여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만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리베이트만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국민들의 약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제안하여, 이는 국민이 약 효가 동등한 적정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히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대한하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 개편안 반대 의사 (1. 30)

비대위는 이번 식약처 승격·개편안은 보건의료와 의약품의 행정관리체계가 분리되어, 주객이 전도된 국가정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의료와 약무를 억지로 분리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약무정책이 크나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라는 부분 안에 약무가 치료방법의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약무정책은 식약처에서 별도 관리한다면 일대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약품이 한국 건강보험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와 허가업무가 건강보험에서 분리되면, 약사 인력관리와 의약품 분류 및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등 의약품 전반 업무와의 유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외 사례를 보아도 한국의 식약성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정부 기관들이, 보건복지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라는 특정직능이 장악하고 있는 식약청의 기형적인 인적구조에 대한 반성과 쇄신이 있어야 하며, 식약처의 약무부문은 본래의 업무소관인 복지부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한약제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인턴제도 폐지' 설문 결과 발표 (1. 30)

의대협은 의대생 3,409명을 대상으로 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73%는 15년 인턴제도 폐지는 너무 빠르다고 답변했고, 14%는 인턴제 폐지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상당수는 오는 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인턴제 폐지에 대한 설문 참여에서는 약 70% 정도가 찬성의 입장을 밝혔고, 인턴제 폐지에 앞서 의학교육 커리큘럼 개선이 시행되고, 과도기 학년인 본과 3학년의 피해를 먼저 최소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서브인턴제 시행, 초기 5개월 순환 근무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협은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들과 논의한 후, 인턴제도 폐지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안을 작성하여 복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귀 결정 (1. 31)

지난 5월 포괄수가제에 반발하며 건정심을 탈퇴한 의협은, 31일 오후에 열린 건정심에 참여하였다. 의협은 국회에서 건정심 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의정 협의 과정에서도 의료계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생하려는 자세를 보여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몰락하는 일차 의료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건정심에 복귀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이 의협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 또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31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는 의협의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회의를 주관한 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건정심의 기능 및 건정심 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부각시켰다.

○ 대한의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 개편 관련 우려 (1. 31)

의협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식약처의 승격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한다는 공약 이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적극 찬성하지만, 식품의 범위에 의약품도 포함시킬 경우 기존 복지부에서 총괄했던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가 이원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 신설로 인해 식품이 복지부 산하 식약청과 농수산부로 이원화돼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던 만큼, 이번에도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어 의약품은 기존 복지부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적절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안전처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병원협회, 약값 조기 지급 운동 선언 (2. 1)

병협이 조사한 '109개 병원의 의약품대금 지급 실태'에 따르면 평균 약값 지급 소요기일은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이 평균 3.2개월 소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5.8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약품 대금의 조기결제를 위한 노력 경주'를 주요내용으로 자율선언을 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제약협회·의약품도매협회와 합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의약품 대금 조기 지급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병원계가 제약계가 상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의견 제출 (2. 1)

의협은 오는 5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를 앞두고, 사전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사항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는 상해부위와 사고 상황, 다발성 정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심사 대상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진료비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손해보험회사만 분쟁조정심의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바꿔 의료기관 역시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2차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심사 위탁업무를 강행할 경우,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1일 의료기관에게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5.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

○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로 작업자 사망 (1. 28)

1월 27일 밤과 28일 새벽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삼성반도체는 27일 오후 1시 31분, 화성사업장 11라인 외부에 있는 '화학물질중앙 공급시설 밸브'에서 불산이 액체상태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다. 사측은 협력사 STI서비스 직원들을 불러 당일 밤 11시에야 보수작업에 착수했다. 수리를 완료한 지 약 2시간이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경, 보수작업에 들어갔던 박 모 씨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후 1시 55분경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28일 17시 경에야 언론에 알려져, 삼성반도체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불산 저장탱크 하부의 밸브가 녹아 누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발생 4개월 만에 일어난 것이고, 12년 10월에서 울산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책임자 처벌 등의 법적 책임을 엄격히 분고, 불산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경기지역 시민단체 삼성 불산사고 합동조사단 구성 요구 / 주민대상 설명회 (1. 30)

다산인권센터, 반올림 등의 단체들은 30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불산누출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동자의 죽음은 삼성전자의 안일한 대처와 물인간적인 태도가 빚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탄하고, 산재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삼성전자와 정부당국을 규탄했다. 이날 단체들은 화성사업장 정문에서 집회를 열기로 예정했으나, 삼성이 오전 일찍부터 보안요원 100여명을 동원 사업장 앞 삼거리에서 바리케이트를 쳐서 장소가 변경되었다. 시민단체들은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의 실체를 규명하고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 작업을 해 온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대책을 마련할 것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30일 저녁 동탄 1동 주민센터에서는 설명회가 열려 삼성의 유출량 축소와 사고 은폐 의혹, 누출대처를 따졌다. 삼성 측은 유출량은 극미량이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사고 현장을 기록한 CCTV화면을 공개하라고 다그쳤다. 주민들은 사망사고가 없었다면 불산누출 자체를 그냥 모른 척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어떤 주민들은 수년간 공장에서 나는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않아왔는데, 개선을 계속 요구하니까 삼성전자가 주민들에게 선물을 하며 입막음을 하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은 30일 오후 사건에 필요한 일부 자료만 제출하였다.경찰은 1차로 협력업체 직원 4명의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삼성전자 안전관리팀 부장과 팀장 등 6명을 불러 사건 은폐와 축소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사고 관련 삼성측 미흡사항 차례로 폭로 (1. 31)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 경기도에 사고 발생시간을 허위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28일 오후 2시42분 삼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문서를 작성할 때 최초 누출 일시는 28일 오전 6시였다. 그러나 실제 불산이 누출된 시각은 16시간29분 전인 27일 오후 1시 31분쯤이다. 양 의원은 삼성이 국가위기대응 시스템을 교란하여 국민을 우롱했으며, 허위 신고와 사건 은폐 기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당시 저장탱크에 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탱크 밸브 교체 작업에 투입되어,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건강한 노동 세상'은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므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상자가 나올 것이 예상되는데도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숨진 박씨는 31일 오후 장례를 치렀고, 1일 경찰은 각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 불산이란 무엇인가?

불산은 불화수소산(Hydrofluoric Acid)으로 불화수소(HF)의 수용액이다. 무색의 자극성 액체로 공기 중에서 발연하며, 유독성으로 피부나 점막을 강하게 침투한다. 불산은 유리 부식이나 주물의 모래 제거 및 스테인리스 표면처리에 주로 쓰이며, 특히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인 웨이퍼를 세척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또 화장실 청소제와 치약·화학비료·농약 등에도 소량의 불산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불산은 산업체와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나, 유리나 금속을 녹일 만큼 독성이 강하고 다른 할로젠 이온보다 입자가 작아 소량의 누출에도 피해가 크다. 불산은 위험유독물질로 선정되어 이를 취급하는 산업체는 유독물질지도점검 의무가 있으며, 국내 불산 허용치는 0.5ppm이다. 불산으로 인한 희상은 몸속으로 침투해 칼슘·마그네슘 이온 등과 결합하고, 이는 근육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칼슘의 수치를 떨어뜨려 전신 마비를 일으킨다. 기체 상태의 불산을 흡입하면 상기도에 출혈성 궤양과 폐부종이 생기고, 액체 상태의 불산이 피부에 묻으면 화상 증상이 나타난다.

6. 질병/기타

○ 서남의대 졸업생 무더기 학위 취소 위기 (1. 20)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2개월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에 따르면 서남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수백억원대 교비를 횡령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고, 교원임용률과 재적학생수를 부풀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 했다. 그리고 의대 임상실습 교육 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였고, 부속병원이 연간 퇴원환자 실제 인원수 및 병상이용률 등이 턱없이 낮아 인턴 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교과부는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학교폐쇄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재학생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부실교육에 대한 패널티로 재학생들에 대한 추가 교육이 있을 수도 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7일부터 서남대 설립자가 세운 다른 대학인 한려대·광양보건대·신경대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하고 있어, 횡령 규모가 더 늘어나거나 추가 퇴출 학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 서남의대 졸업생 학위취소 관련 의료계 반발 (1. 21)

의대 졸업생에 대한 학위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현재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난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발표하여 학위 취소는 성급한 결론이며, 서남의대 측은 학생과 졸업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교과부가 서남의대의 부실 교육 실태를 계속 묵과했으며,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고 비판했다. 즉 이번사태는 불법과 편법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한 교과부의 책임인데, 졸업생들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것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 역시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면허취소를 막겠다고 천명하며, 교과부의 결정이 실행된다면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의협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서남의대 사태 관련 향후 대책 논의 (1. 25, 28)

서남의대 사태와 관련하여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의협은 학생보호 대책을 논의하고자, 25일 '서남의대 학생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인숙 의원과 노환규 회장을 비롯하여, 서남의대 재학생·졸업생·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서남의대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30여명과 교과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교과부의 서남의대에 대한 감사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임상실습기간은 계산상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문가의 명확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들은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학교 측에서 해야한다고 말하며, 추계 데이터를 지금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원칙대로 규정에 따라 했을 뿐이라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의협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이 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만큼 이는 전 의료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남기훈 의장은 학생들의 단체행동권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서남의대 재학생과 임상실습 미달 졸업생을 구제하는데 팔을 걷어 부치겠다고 나서며, 재학생에 대해서는 여러 대학과 협의를 거쳐 이동교육을 통한 교육권을 보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임상실습 미달 졸업생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면허취소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을 통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 미국 살인 독감 사태 지속 (1. 20)

1월 20일 현재 독감은 2개주를 제외한 48개주 전 지역에 퍼졌고, 숨진 어린이가 29명에 이르렀다. 이번 살인독감으로 실제 사망한 어린이수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며, 독감 예방 접종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번에 독감이 확산된 주요 경로는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은 화장실 변기보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10배 이상 검출되는데, 화면을 만지던 손으로 입과 코를 만지다 보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도 있다.

○ 호주산 노로바이러스 'GII-4 시드니', 미국 노로바이러스 발병의 60% 차지 (1. 28)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놓은 '발병률 및 사망률 주간보고서'에서는, 12년 9 ~ 12월 미국에서 보고된 노로바이러스 발병 사례 중 58%가 'GII-4 시드니(Sydney-2012)' 변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호주·일본·미국 등지에서 보고된바 있으며, 12년 3월 호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CDC에 의하면 미국에서 GII-4 시드니는 지난해 9월에 첫 보고됐으며 당시 전체 발병 케이스 중 19%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노로바이러스 발병케이스 266건 가운데 141건이 GII-4 시드니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호주와 미국의 무역 관계자들 역시 걱정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 2012년 감염병 신고환자 5.7% 감소 (1. 29)

12년 감염병 신고 환자수는 93,119명으로 11년 98,717명보다 5,598명 감소했다. 감염병의 환자발생 규모는 결핵이 40,126명(총 신고건수의 4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두 27,770명(29.8%), 쯤쯤가무시증

8632명(9.3%), 유행성이하선염 7541명(8.1%), B형간염 3342명(3.6%) 순이었다. 급성감염병은 총 52,124명이 신고되어 11년 58,265명 대비 10.5% 감소했다. 감소한 감염병은 A형간염·홍역·수두·말라리아 등 19종이었고, 증가한 감염병은 백일해·유행성이하선염·B형간염·쯔쯔가무시증 등 12종이다. 만성감염병은 12년 총 40,995명이 신고되어 11년 40,452명 대비 1.3% 증가했다.

○ **일본,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사상 최초 발병 (1. 31)**

일본 후생노동성은 중국에서 09년경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야마구치현에 사는 어른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혈소판 감소증은 통상 위장관·중추신경계 출혈증세가 나타나고, 피부나 점막에서도 출혈이 일어나 자반증·혈뇨·비출혈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입속에서 피가 나고, 피부를 압박했을 때 반점과 멍이 생긴다. 그리고 병이 발병하면 백혈구와 혈소판의 수가 크게 감소하며, 손발의 무기력과 혈뇨, 검은색 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환자는 해외여행 경험이 없이 일본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인균 진드기는 일본 아오모리 남쪽 산야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